열린 충남 겨울-최종 2006.1.17 11:29 AM 페이지 159

충남지역 미래인재 육성방안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과 건양대학교(총장 김희수)는 12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 건양대학교 명곡정보관 6층 국제회의장에서 초·중등학교 교사, 자치단체 및 교육청 관계자, 직업교육 전문가, 관련 학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지역 미래인재 육성방안"에 대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미래인재육성은 충청남도 도정 중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심포지엄은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안을 수립하고 충남 지역에 적합한 인재육성 기본정책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건양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장 정경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모두 세 가지 주제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권경주 교수는 "충남 청년지도자 육성방안과 과제"에서 농촌 지역 청소년의 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살피고 지역사회 청소년 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지역 연계방안을 강조하였다.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김언주 교수는 "충남영재교육의 실태와 효율적 추진방안" 발제에서 국가 수준의 영재교육과 충남의 영재교육시행계획을 비교하고 이에 따른 10대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학술 심포지엄에서 다루어진 세 가지 주제에 대해 김안국 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현식 교수(호서대학교), 하주현 교수(건양대학교)가 진지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심포지엄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주최하였으며 건양대학교 기획진로처장 황복주 교수와 아동보육학과 황성원 교수가 주관하였다. 관계자들은 "충남지역의 미래인재양성방안에 대한 이번 심포지엄이 지역대학과 지역 연구기관의 유기적 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열린 충남 겨울-최종 2006.1.17 11:29 AM 페이지 161

충남 청년지도자 육성방안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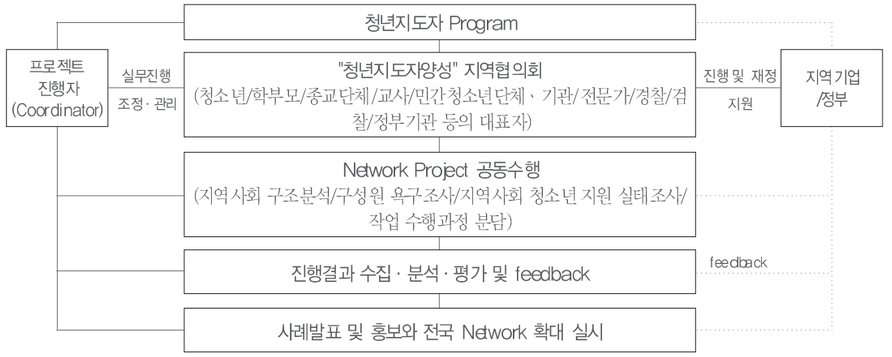
권경주 |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늘날의 우리 지역사회는 급격한 산업발달과 도시화로 인한 사회변동과정을 겪게 됨으로써 사회해체적 성격을 강하게 노출시키고 있다. 도시문제는 지역사회해체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회문제로 결과적으로 지역사회내의 청소년문제를 크게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육성의 과제는 기성세대와 전체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기능회복을 통한 공동체 확립이 선결되어져야 하며 이 중심에 지금의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으로 대비하고 능력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여러 나라에서도 보편화 되어 지역공동체 교육운동을 통하여 견실한 민주시민사회를 구축한 예를 보면 덴마아크의 국민고등학교, 캐나다의 농촌라디오 토론회운동, 일본의 공민관을 통한 교육운동, 서독의 국민고등학교, 미국의 지역사회학교운동 등은 잘 알려진 지역공동체운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역사회는 단순한 주거 및 생활공간으로만 인식되어 왔을 뿐 지역사회조직, 시설의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의 복지증진이라는 적극적인 기능은 간과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청소년기관, 단체들은 해당지역 청소년들의 특성과 요구에 기초한 지역중심의 활동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의 결여로 많은 인력 및 자원의 낭비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자원과 서비스 운용의 구심점을 확립함으로써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청소년기관과 단체들을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조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년지도자 육성체계의 강화와 더불어 지역사회 내에 산재해 있는 제반 사회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직화하여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사회의 확립은 지역사회가 사회구성원의 복리를 위해서 투자하고 역할을 확대해 나갈 때 가능하다. 지역주민은 자기 지역사회의 청소년육성에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문제는 지역주민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지도자의 지원확보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웃에 누가 사는지 조차 모르면서 자라기 쉬운 젊은이들이 소외를 극복하고 사회를 이해하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좋은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강제적으로 참여를 강요하는 활동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충남의 청소년지도자 양성을 위한 제언을 끝으로 논의를 마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컴넷(ComNet) 체계도

1.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초기단계에서의 적극적 개입과 지원

충청남도와 시 군은 청년지도자 양성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초기 형성단계에 바람직한 인적 · 물적 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즉,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홍보와 각 지역사회 자원들의 참여 및 연계, 사전 준비모임의 주선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하고, 지역사회의 사회조사나 여러 프로그램의 개발과 수행 등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2. 네트워크 전담 운영자(coordinator)의 투입 및 재정지원

열린 충남 겨울-최종 2006.1.17 11:29 AM 페이지 163

충청남도는 네트워크 초기 형성단계 과정과 프로그램 관련 지역사회 조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그리고 네트워크의 핵심 본부인 네트워크협의회 각 구성원의 연계 · 조정 및 협력체제 구축 등 네트워크 운영의 모든 과정을 전문가로서 총괄책임을 지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중요한 전담운영자(coordinator)를 반드시 네트워크 내에 두어야 한다.

만약, 상근 인력으로 투입하기에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면 지역사회 내 전문적인 유관기관에게 위탁을 주어 그 기관의 기존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과 재교육 및 연수를 통해 코디네이터 역할을 전문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자치단체 장의 지속적 참여 제도화

지방자치 단체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를 통하여 청년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자치단체장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초기 형성단계에서는 경우에 따라 네트워크협의회의 장의 역할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매번 참석하기 어려울 시를 대비하여 관련 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스스로와 지역구성원들 및 정부 관계자들에게 의식을 심어주도록 해야 한다.

4.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지자체와 민간부문의 공동 협력체제 구축

충청남도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폭력 대책 관련 민간부문의 각 자원들 즉, 변호사, 의사, 교사, 종교인, 기업인, 학부모, 청소년지도사, 기타 청소년지도 관련 지역사회 유휴 자원인력 등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네트워크 형성단계에 지역구성원들이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및 코디네이터 등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공동 협력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열거한 민간부문들 가운데 중 고교와 지역의 대학 들은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참여하려는 자세와 협력의지를 가지고 시설과 전문가들을 지원하며 네트워크 형성과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5. 핵심본부인 네트워크협의회의 신중한 구성 및 역할과 책임 명문화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실질적 핵심본부(headquarter)라 할 수 있는 '네트워크협의회'의 구성은 향후 네트워크의 운영을 직접 주도하고 모든 사업을 결정하므로 신중히 구성원들을 선별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거나 자치적 운영을 하더라도 구성원들의 뚜렷한 역할과 책임을 조례나 협의회 규정에 명문화하여야 한다.

네트워크협의회 각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중지를 모으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자치단체 장은 네트워크 형성단계를 제외하고는 주로 협의회 밖에서 운영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협의회는 자치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각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는 코디네이터가 조정하고 화합하는 기능을 가지고 중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네트워크 운영결과의 분석 · 평가 및 feedback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운영결과는 분석 및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며 그 결과가 환류(feedback)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시 군은 이에 필요한 소요경비와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네트워크의 최종작업인 사례발표와 전국적 홍보 그리고 과정을 수료한 청년지도자들의 지역개발참여 네트워크 확산의 사전 작업 의미가 있으므로 코디네이터(coordinator)가 전문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때에 모든 가능한 지원을 통해 도와야 그동안의 노력이 효율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7. 네트워크 운영결과 사례발표와 홍보 및 모델의 전국 확산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폭력문제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네트워크 운영결과에 대한 사례발표와 모델사례 발굴 및 홍보와 전국 network 확대 실시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와의 정책적인 연계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대통령 청소년 특별회의와 같은 중앙차원의 관련 사업이나 타 자치단체와의 프로그램 협력 사례 발표회를 갖고 포상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충청남도에 적합한 지역지도자 개발모델을 전국에 보급하는데 주도적인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열린 충남 겨울-최종 2006.1.17 11:29 AM 페이지165

8. 법제도 제정 및 개선을 통한 네트워크 지원

충청남도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재정적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또는 위탁운영자나 기관이 청소년폭력 대책 마련을 위하여 지역사회 조사나 청소년폭력 대책 관련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등 목적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제반 여건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의 제정 및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지도자 양성방안을 위한 전제 조건

박현식 |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우리사회의 문제는 급속도로 진행되어온 현대화, 산업화, 도시화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비단 청소년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사회의 복합적인 문제의 원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권경주 교수님의 논문에서 지역청소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획일화된 문화와 입시위주의 청소년문제에서 지방(농촌지역)청소년 상황의 인식 속에 대안 제시에 큰 의미를 둔다.

청소년의 문제는 정보화에 따른 비인간화와 가치혼란으로 인해 정체성의 문제는 미래사회의 전망을 불투명, 불안하게 예견케 한다.

우리나라의 획일화된 문화 환경속에 지역적 차이로 인해 청소년 스스로 사회와 문화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이질감, 소외를 갖게 해 주는 현상을 청소년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로 이해해야 될 것이다. 이러함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역적인 상황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특화된 프로그램의 부재와 입시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청소년 스스로의 의사결정 구조, 의사전달로 인한 정책결정이 가능해질까? 라는 문제를 제기해 봐야 한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위원회의 대책으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로 인식해야한다.

논문에서 지적했듯이 지자체는 중앙정부 정책결정에 따른 집행기관으로의 역할로 인식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해결의 방안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리더십 배양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었는데 현제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속에 청소년문제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의 모호성을 지적한다.

이러함의 원인은 지방정부가 당면한 한계로 재정분권화로 인한 예산의 부족과 인력의 부족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역할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되어야 한다.

두 번째,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정책결정기관의 중복성과 프로그램 집행기관 또한 중복되고 있음으로 자원 낭비와 효율성, 효과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갖

열린 충남 겨울-최종 2006.1.17 11:29 AM 페이지 167

게 한다. 이러한 한계는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나타난다.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결벨트모형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학교임으로 교육적 입장만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청소년의 문제를 비행, 탈선의 사회문제로만 인식되고 있는 상황을 비추어 본다면 정책결정, 집행기관의 혼란은 더욱 심각한 형태로 등장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내의 다양한 자원의 참여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문제의 방향을 세 가지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첫째 지역사회의 측면이다. 청소년들의 문제를 접근해야하는 지역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고령화사회문제중하나는 농촌지역의 현상이다. 그중 특이한 현상중 하나가 조손가정이 도심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의 안정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의 문화 환경의 부족이다. 이는 언론 및 인터넷으로 유포되는 문화와 지역 내 보유하고 있는 문화의 차이로 인해 막연한 동경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내에 청소년들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만한 충분한 공간, 시간의 부족이다.

둘째, 공급자원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청소년 문제의 접근은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문제는 교육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지역기관들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이루는 접근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와 지역복지관, NGO등 자원네트워크를 통한 인프라구축의 요구된다. 재정분권화로 인한 지방정부의 예산부족은 사회복지축소, 위기현상으로 복지다원주의를 요구로 공급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고 생산적형태의 변화를 요구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문제도 복지적 측면으로의 접근을 위해 지역자원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공급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자율성의 측면이다. 청소년 문제를 위한 실행기관의 자율성과 청소년스스로 참여,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핸 보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와 실행기관의 지원과 집행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이다. 자원의 공급기관으로 인해 집행기관은 종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나타난다. 청소년의 문제는 이러함에서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은 요청 되고 있고 그 대안으로 청소년 지도자양성을 권 경주 교수님이 밝히고 있는 점에서 동의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지방의 상황과 자원의 공급, 참여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충남 영재교육의 실태와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한 토론

하주현 | 건양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접어들면서 우수 인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영재의 지적 능력과 재능을 계발시킴으로써 그들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선시키는 공헌도는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한 사람의 인재가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수만 명, 수백만 명을 먹어 살리는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이제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인재 선발 및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각국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등 영재 교육 또는 수월성 교육에 역량을 집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15%의 학생에게, 영국은 5~10%, 싱가포르는 1%, 호주는 1%, 이스라엘 3%, 대만 1%, 러시아 1%의 학생에게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현재 우리나라의 영재교육대상 학생은 04년도 기준으로 0.3%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2000년에 영재교육진흥법이 공포되고 난 후 2002년도에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영재교육을 포함하여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이 발표된 바 있으며, 2010년까지 전체 5%의 학생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각 지역마다 미래인재 양성에 주력을 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역마다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특목고를 육성하여, 이들이 후에 지역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충남지역의 미래인재를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제 모색을 하는 이 자리가 매우 뜻 깊고 의미 깊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김 언주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충남 영재교육의 실태와 효율적 추진방안"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토론자는 김 언주 교수님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본 논문을 읽고 토론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들을 지적하고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열린 충남 겨울-최종 2006.1.17 11:29 AM 페이지 169

1. 영재교육의 목표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2년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기본 방향을 담은 '영재교육 프로그램 구성、운영에 관한 권장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여기에 제시된 영재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교육대상자의 창의적 생산능력을 최대로 계발하고 도덕성을 함양한다.

둘째, 영재교육대상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를 최대로 계발한다.

이외에도 영재교육과 관련한 여러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재교육의 목표를 종합해 보면, 창의적인 문제해결력 신장,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과 태도 함양, 도덕성 、사회성 、지도력의 계발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에의 공헌으로 요약할 수 있다(박성익 외, 2003). 이는 일반학생을 위한 교육목표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영재교육에 있어서는 창의적 문제해결력,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 자기력의 계발이 더 많은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충청남도의 영재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적 과학영재의 조기 발굴과 교육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한다.

둘째, 학생 개인의 자아실현 및 성취 욕구를 충족한다.

충청남도의 교육목표가 국가적 영재교육의 목표와 차이점이 있다면 창의적 과학영재를 양성하는데 특화가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영역의 영재를 선발하고 양성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때 과학영재에 한정해 교육의 목표를 삼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국가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군들이 충남에서 배출되어야 지역의 발전이 소홀히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영재만이 아니라 인문영재의 양성은 지역의 미래에 대한 꼭 필요한 투자가 될 것이다.

2. 영재교육의 시행 및 운영계획

표1.에 의하면, 학급 수준에서 영재교육을 시행하는 학교는 충남 전체 모두 3곳으로, 초, 중, 고 각 1개교씩이다. 또한 지역 교육청 소재 영재교육원은 모두 7곳으로, 천안교육청, 논산교육청, 서산교육청, 보령교육청, 부여교육청, 홍성교육청, 예산교육청 등이며 이외에 충남교육청 영재교육원으로 충남과학고가 있다. 대학수준의 영재교육원은 공주대학교에 있다. 그러므로 충남의 시군 지역분할을 미루어볼 때 아직까지도 영재교육선발 및 교육이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특히 영재선발에 대표적인 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 특목고의 경우, 04년도 기준을 전국적으로 모두

표 1. 충남 영재교육 추진계획 총괄표(2005)

구 분		기관수	학급수	학생수	강사수	연수인원	대상학생	개설과목	운영예산
2005 계획	학급	3	37	640	150	-	초.중.고	전계열	620,380,000원
	원	8	31	620	127	120	초.중	수학.과학	
	대학	1	24	260	50	-	초.중.고	수.과.정보	
	계	12	92	1,520	327	120	초.중.고	-	
2003 실적		4원	13	238	60	29	초.중.고	수.과.정보	344,198,000원
2004 실적		4원	14	280	60	41	초.중	수학.과학	573,841,000원

118개의 학교가 있으며, 충남에는 현재 충남과학고등학교 1개교만 있으며, 앞으로 2010년까지 예술고와 정보고 각각 1개교씩만 개소될 계획이 있어서, 영재학교의 수가 타도에 비해 현저히 적다. 보다 더 많은 영재학교를 개소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충남의 영재학교출신의 영재들은 충남이 고향이 아니더라도 제 2의 고향이 되어 충남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영재육성을 위한 전략

김언주 교수님이 제시하시는 "영재육성을 위한 10대 전략"은 충남의 영재교육에 꼭 필요한 제언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본 토론자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현재 교육청과 공주대학교 영재교육원 주체로 이루어지는 영재교육은 그 내용이나 대상에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참여대학의 확대, 연구소, 기업체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에 의한 영재교육을 통하여 영재교육의 질과 양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영재교육을 시행하는 주체 간에 역할 분담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각의 역할 분담체계가 마련이 되어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도 교육청에서는 영재교육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며, 초、중、고에서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학에서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영재교사 연수를 실시하며, 연구소 및 연구기관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지원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영재교육은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재량활동 시간이나 방과후 활동 시간, 또는 주말프로그램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 시군별로 영재

열린 충남 겨울-최종 2006.1.17 11:29 AM 페이지 171

교육의 선발 및 교육이 모두 제공되지는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외딴 지역의 학생들이 재량활동시간이나 주말에 영재교육을 받는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농·어촌 및 도서·벽지 학생들을 위한 시·도교육청별 사이버 영재교육 운영이 확대되어야할 것이며, 방학 중 영재교육 캠프가 확대되어 시행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영재교육의 영역을 과학뿐만이 아니라, 예술, 언어, 창작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또는 특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 배출된 다양한 분야의 영재들은 곧 우리나라를 이끌 인재가 될 것이며, 이는 충남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영재교육에 있어서 창의력 교육이 중시되어야 한다. 2002년에 마련된 "영재교육 프로그램 편성·운영 기준"에서는 창의력 교육이 영재교육의 지향해야할 중요한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충남의 영재교육은 창의력 교육보다는 교과 중심의, 특히 수학 및 과학 분야에만 치중하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창의적 사고는 서로 다른 내용 영역이나 지식 영역의 틈새에서 생기거나 어떤 것을 기존의 것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때에 생긴다. 21세기가 지식기반사회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 미래의 인재들에게 무엇보다도 통합적이고 생산적인 사고방식을 계발케 하는 창의력 교육은 반드시 제공되어야할 것이다.

여섯째,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 영재교육의 성공 여부는 수행하는 교사에게 달려있다. 교사는 성공적으로 영재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테크닉, 그리고 소명의식을 지녀야 한다(김홍원, 2002).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제안하고 있는 "2005 영재교육 시행계획"에 의하면, 영재교육 담당 교원 연수는 국내연수와 국외연수로 나누어지고 있으나, 국내연수의 경우는 주로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국외 연수는 2005년도에는 계획에 있지 아니하다. 선진외국의 우수한 영재교육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접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임이 분명한 데, 오히려 우수한 교원양성에 대한 지원 풍토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수한 교원양성에 대한 행·재정적 여건이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끝으로 본 토론자에게 충남 영재교육의 실태와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신 김 언주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충남의 도시4_ 청양군 Cheongyang-Gun

하늘 빛, 땅 빛, 물 빛 모두 아름다운 靑陽

윤갑식 | 도시지역연구부 책임연구원

요즘 청양에 가면 "하늘 빛, 땅 빛, 물 빛 모두 아름다운 청양으로 오세요"라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다. 청양은 과거 한때 구봉광산, 삼광광산 등 광산이 개발됨에 따라 인구가 십만명 이상에 이를 정도로 번창하였지만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정부의 각종개발정책으로부터 소외됨에 따라 오늘날 충남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중에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다. 낙후된 지역의 현실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어 주민이 인근 대도시로 떠나게 됨에 따라 지역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금까지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자는 인식이 지역주민들 사이에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앞에서 언급한 문구로 대표되는 그린-컴(Green Come) 운동이다. 그린-컴 운동과 더불어 최근 자립형 지방화를 추구하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도읍육성사업과 신활력사업, 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의 수혜지역으로 선정됨으로써 청양군은 더 이상 낙후지역이 아니라 누구나 찾고 싶은 청정지역으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